

보도시점 (온라인,지면) 2026. 2. 23.(월) **즉시보도**

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, 함양 산불 등 대응상황 긴급점검회의 개최

- 가용한 모든 장비·인력 투입, 인명피해 방지에 총력 대응
- 산불 예방수칙 준수 등 국민들의 적극적 산불 방지 동참 호소

□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남 함양군 산불 등 주말 동안에 발생한 산불*과 관련, 산림청, 소방청, 경찰청, 국방부, 복지부, 경상남도, 함양군, 기상청 등 관계기관 합동 대응상황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했다.

* 22건(진화완료 21건(충남 서산·예산, 강원 고성, 충북 단양 등), 진화중 1건(함양군))

○ 이날 회의에서는 주말 동안의 산불 발생 현황 및 현재도 진행 중인 경남 함양군 산불*과 관련한 기관별 대응 상황과 주민대피상황 등을 점검하고,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관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.

* '26.2.21. 21:14 발생, 진화율 32%(2.23일 08:00 기준)

□ 특히, 아직 진행 중인 경남 함양군 산불 관련해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,

○ 신속한 주민 대피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조치와 산불진화 대원 등 현장 인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각별히 유의하도록 당부했다.

□ 또한, 예년에 비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, 강풍까지 겹치면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한층 강화된 산불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각 기관에 요청했다.

○ 우선, 산불의 주요 원인이 개인 부주의*라는 점을 고려해 담배꽂초 투기, 불법소각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.

* 산불 원인의 대부분은 입산자 및 성묘객 실화, 불법소각, 담뱃불, 작업장 실화 등

- 지방정부는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 등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계도·단속하고,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,
- 관계기관은 실화자 등에 대한 수사·검거, 형사처벌 등을 적극 집행해 줄 것을 논의했다.

□ 또한, 본격적인 행락철 산불 위험에 대비하여 지방정부 등 관련 기관은 산불 예방 및 대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.

- 위험지역 현장 점검 강화, 진화 인력과 장비 전진배치,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촘촘한 감시 및 지역주민들의 자율 순찰을 확대하고,
-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섬세한 주민대피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.
- 아울러 불가피하게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해 최소를 위해 현장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, 진화 대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 줄 것을 강조했다.

□ 윤호중 장관은 “작년 경북 산불에서 경험했듯 작은 불씨 하나가 수십 명의 인명피해와 수천 헥타르의 산림을 태우는 심각한 상황”으로 번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,

- “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수칙*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불 방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”라고 말했다.

* ▲입산시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, 취사 또는 흡연 등 불씨를 만들 수 있는 행동 삼가 ▲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·쓰레기 등 소각 금지 ▲연기나 불씨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신고

담당 부서	사회재난실 환경산림재난대응과	책임자	과 장	안길주 (044-205-6170)
		담당자	사무관	고용석 (044-205-6171)